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5년...끝이지 않는 직장갑질

광주지법 부하직원 의자 묶어놓고 수십차례 폭행한 상사 징역형 지스트 인권위, 2년 연구 성과 가로챈 연구소 소장 중징계 요구 여수공항 직위 이용 직장 괴롭힘 발생 의혹...직원들 탄원서 작성 직장갑질 119 조사...66.7%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답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직장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생일빵'이라며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격무부서로 보내는 등의 '갑질'도 여전했다. 갖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등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지

난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들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폭행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가 부하직원을 때린 건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입사한 지난 2019년 5월 5일부터 3년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폭언으로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비검사용 바늘로 팔을 찌르는 등 14차례에 걸쳐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스트 산하 연구소 소장 B씨가 연구소 계약직원 C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C씨가 추진해온 2년동안 진행해온 연구책임자 역할을 갑자기 B씨가 가로챈 것'과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C씨에 대한 험담을 한 점'은 직장갑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C씨는 지난 2022년 5월에 2년간 맡고 있던 업무의 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C씨가 항의하자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2년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말도 아니게 개판이다"고 C씨의 업무 실적을 깎아 내렸다.

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의사에 반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고 C씨에게 별도의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여수공항에서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항보안 여수지사 직원들은 상사 D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고 있다. 상사 D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도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D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특정해 '저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등 왕따로 만들어 결국 퇴사에 이르게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호소이다.

D씨 뜻을 거스르는 경우 불이익을 가해서 다른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D씨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탄원서에 담겨 있다.

또 D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급작스러운 연장근무 요청에 직원이 개인일정으로 힘들다고 하자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직장 내 갑질로 한 직원은 공황장애를 앓

게 됐고 결국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 이후에도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호소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절라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고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와 '괴롭힘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세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체 48%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 행위자는 대부분 대표, 임원, 경영진 등 높은 직위를 가진 이들이었으며 임원이 아닌 상급자(24.0%), 비숙한 직급 동료(24.0%)도 있었다.

배너는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리 감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지원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쓰비시 강제동원 정신영 할머니 손배 소송 1심서 승소

광주지법 4명에 위자료 지급 판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나주)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18일 정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등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월 소송을 낸 지 꼬박 4년 만이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8개월간 고초를 겪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2022년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보험 탈퇴 수당 명목으로 931원을 송금해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는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각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다.

미쓰비시 측은 재판 관할권이 일본법원에 있고, 한일협정으로 인해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정 할머니는 "감사하다. 눈물이 나온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렇고 95세(만 94세)나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갈 날



피해자들의 피눈물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밖에 안 남았다"면서 "일본이 '어려서 데려다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몇 명 안 남았는데 보상도 일본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

본이 진정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려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이상철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철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

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측 항소를 일부 인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모임의 성격, 피고인의 지위, 식사 모임 현장에서 식사비를 내는 연출 장면을 목격했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기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전 규모가 533만원으로서 경미한 금품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애초 대법원 상고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철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명 재심서 무죄

76년만에 명예 회복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이 76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8일 내란·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故) 박생규·최만수·김경렬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 14연대에 동조해 공중치안과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내란·포고령 위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다.

박씨는 지난 1948년 12월 13일 광주호남계엄지

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최씨도 같은날 박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감천형무소로 이송된 뒤 수감중에 숨졌다.

김씨는 지난 1948년 11월 25일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처형됐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